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03~08/09

1. Section 301 관세의 정책화 및 법적 도전
2. 미국 제조업 확장과 물류 수요 영향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2

종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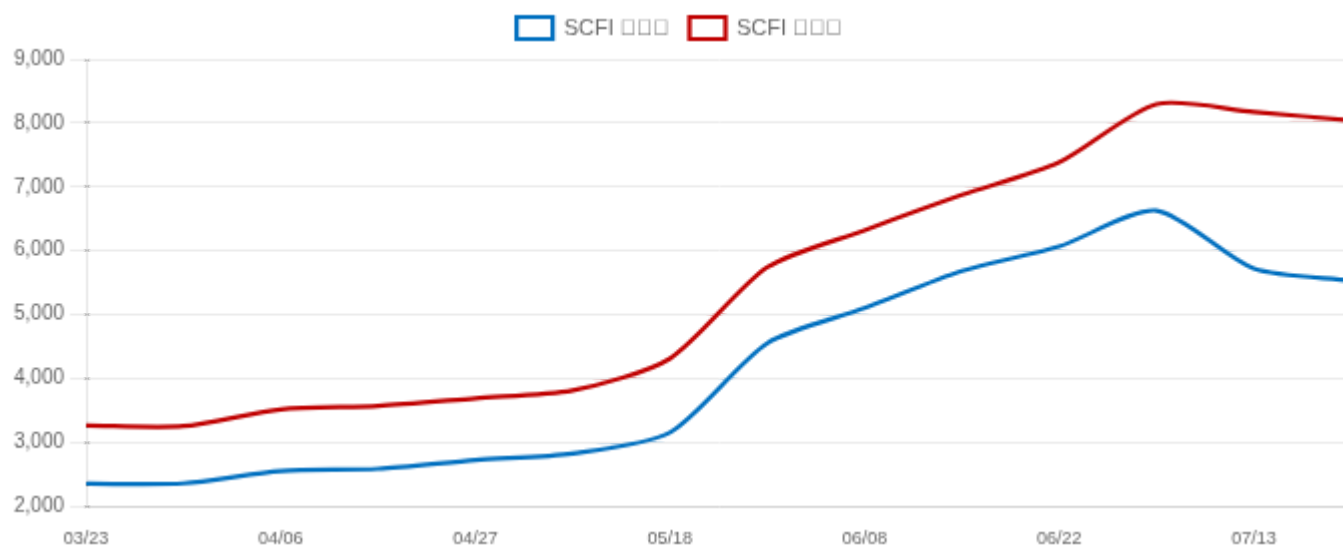
이번 주 미주 권역은 미국 무역법 301조의 정책적 전환과 제조업·물류 흐름의 이중적 신호가 핵심 흐름을 이루었음. 301조 관세가 특정국 겨냥을 넘어 광범위한 통상정책 플랫폼으로 제도화되는 한편, 제조업은 7개월 연속 확장하며 물류 수요를 견인했으나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함.

이러한 관세 정책의 제도화는 25개 주 정부와 수입업체의 위헌·위법 소송으로 법적·경제적 충격을 격화시키며, 향후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을 키울 전망이다.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경우 공급망 재편과 비용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음.

제조업 확장은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 물류 부문에 긍정적이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회복세를 제약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와 리스크 관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5,535 \$/FEU	07/20	-3.3%	-8.8%
SCFI 미동안	8,040 \$/FEU	07/20	-1.6%	+8.9%
KCCI 미서안	6,172	08/03	+0.9%	-10.8%
KCCI 미동안	8,986	08/03	+2.6%	+6.7%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7/20

Section 301 관세의 정책화 및 법적 도전

미국 무역법 301조가 특정국 겨냥 한시 조치를 넘어 광범위한 통상정책 플랫폼으로 제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25개 주 정부와 수입업체들이 위한·위법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관세 정책의 법적·경제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음.

미국은 당초 대중국 견제 수단이었던 301조를 브라질·유럽연합·베트남·인도·멕시코 등 60여 개국으로 확대 적용 중이며, 강제노동 대응을 명분으로 10~1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 무역 컨설팅 업체 카고트랜스는 301조가 더 이상 단일 품목·국가 대상이 아닌 다양한 통상 목표에 동원되는 '플랫폼'으로 진화했다고 분석하며, 향후 변형된 형태의 301조가 반복 등장할 것으로 전망함.

이러한 광범위한 관세 부과 배경에는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초한 포괄 관세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화되자 행정부가 우회로 301조를 활용한 정황이 자리함. 실제 미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유입 차단 실패를 이유로 교역 상대국에 일률적인 관세를 매겼으나, 각국의 강제노동 연계 실태와 세율 간 합리적 연결 고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됨.

25개 주 연합과 민간 기업들이 제기한 소송은 이러한 관세가 자의적이고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주 정부 조달 비용 증가와 경제 피해를 구체적 수치로 뒷받침함. 소송 결과에 따라 301조 기반 관세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됨.

수입업체와 화주 입장에서는 통관 집행 강화와 관세 감면 기회 축소라는 이중 부담에 직면함. 카고트랜스는 기업들이 장기적 관세 환경을 전제로 공급망 전략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소송 전망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즉각적인 관세 비용 흡수 또는 전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미 USTR은 강제노동 연계 명목으로 60개 교역국에 10% 또는 12.5%의 301조 관세를 부과.
- 카고트랜스 분석: 301조는 단일 품목 대응 넘어 다양한 정책 목적의 '관세 플랫폼'으로 전략.
-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 포괄 관세를 무효화하자, 행정부가 301조로 우회함.
- 25개 주 소송: 관세가 자의적이고 법적 정합성 결여, 주 정부 조달에 실질 피해 발생.
- 수입업체 2곳도 유사 소송을 제기하며 관세 폐지 및 환급을 요구 중.

전망

법원이 301조 관세의 합리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사함에 따라 향후 수개월 내 일부 또는 전면 중단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됨. 그러나 연방정부의 항소와 새로운 정책 변형 시도로 혼란이 지속될 공산이 크며, 기업은 관세 불확실성을 상수로 간주하고 대비해야 함.

시사점

화주 — 장기적 관세 부담을 전제로 공급망 다변화와 비용 전가 전략을 서둘러야 함.

포워더 — 관세 자문 서비스와 우회 통관 솔루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임.

항만·선사 — 관세 충격으로 일부 화물 흐름이 지연·변경되며 항만 물동량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미국 제조업 확장과 물류 수요 영향

미국 제조업이 7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이며 물동량 증가로 물류 부문 수요 확대를 견인하고 있음. 그러나 높은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공급망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미국 제조업 경기가 지난 7월까지 7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가며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5.6%를 기록함. 이는 전월 대비 2.3%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경기 확장 국면이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함. 특히 운송장비, 기계, 컴퓨터·전자제품, 식음료·담배 등 6대 제조업종 중 4개 업종이 성장을 주도하며 관련 물류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음. 전체 경제도 21개월 연속 성장세를 나타내 제조업 물동량 증가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확장세의 주요 원인은 견조한 소비 수요와 재고 보충 움직임에 기인하며, 일부 업종에서는 리쇼어링(reshoring) 투자 효과도 나타나고 있음. 다만 공급 관리 협회(ISM)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2%가 부정적 전망을 보였으며, 부정 응답의 57%에서 가격 변동성이 언급될 정도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여전히 강함. 이란 관련 지정학적 긴장(43%), 리드타임 증가(22%), 관세 이슈(18%) 등도 공급망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함.

제조업 확장은 컨테이너 수송, 창고 보관, 트럭·철도 운송 등 물류 전반의 수요 증가로 이어짐. 그러나 공급망 차질과 물류비 상승이 동반되면서 화주들은 재고 관리와 운송비 통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됨. 특히 운송장비와 전자제품 분야의 성장은 고부가가치 화물의 물동량 증가를 의미하므로, 포워더와 선사 입장에서는 고수익 화물 유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음. 반면 원자재 가격과 해상·항공 운임 변동성은 물류비 예측을 어렵게 만들어, 화주와 물류 기업 간 장기 계약 협상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7월 미국 제조업 PMI 55.6%로 전월 대비 2.3%p 상승, 7개월 연속 확장세
- 운송장비·기계·컴퓨터·전자제품·식음료 등 대형 제조업종이 성장 주도
- 응답 기업의 62% 부정적 전망, 부정 의견 중 57%가 가격 변동성 지목
- 이란 전쟁 리스크(43%), 리드타임 증가(22%), 관세(18%)가 공급망 불안 요인
- 전체 경제 21개월 연속 성장으로 제조업 물동량 증가세 지속 전망

전망

미국 제조업 경기 확장은 하반기에도 이어지며 물류 수요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이나, 가격 변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공급망 안정성을 위협하는 복합적 양상을 띠 전망임. 특히 연말 성수기 대비 재고 확보 움직임이 가시화되면 물동량 증가 폭이 더욱 커질 수 있음. 다만 지속적인 물류비 상승은 화주들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켜 일부 수요 억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상존함.

시사점

화주 — 제조업 확장 기조 속 물동량 증가가 예상되나 물류비 변동성 확대로 예산 관리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포워더 — 고부가가치 화물 물동량 증가는 수익성 개선 기회이나, 운임 변동성과 공급망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짐.

항만·선사 — 제조업 확장에 따른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로 단기적 수혜가 예상되나, 가격 변동성과 노선 불확실성에 대비한 운영 전략이 요구됨.